

## [첨부]

### 문체부 감사결과 중간 발표에 대하여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하여>

① 문체부는 감사에서 감독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을 추천한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 지적했는데,

— 협회는 정해성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이 1~3순위를 협회에 보고하고, 면담과 협상을 위한 해외 출장을 잡던 중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후속업무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기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첫째, 규정상 검토했을 때 전력강화위원회는 정관상 대표팀 운영과 관련한 조언, 자문, (인사)추천을 하는데, 이번 감독 추천의 임무에 있어 전력강화위원회는 6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5명의 후보까지 추린 뒤 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공식적인 회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정해성 위원장은 이후 3명의 최종 후보를 정하고 협회에 추천한 바, 이것으로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는 규정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7월이 임박한 시점에 2026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9월 5일) 일정을 고려할 때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등 감독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기에는 가용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셋째, 이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은 기술파트의 최고 행정책임자이자 해당 후보들과 화상면담 자리에도 참석했던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자연스럽게 지목되었습니다.

대표팀 감독을 결정함에 있어 협상과 계약 세부 진행도 중요한 만큼 정해성 위원장의 사의표명 이후 업무를 협회 기술분야 행정책임자가 이어받은 것에 어떤 심각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문체부는 기술총괄이사가 임시 온라인 회의(6월 30일)에서 위원들에게 모든 후속 절차를 위임받은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은 감독선임 관련한 위원의 업무를 6월 21일 열린 제10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정해성 위원장에게 이미 전권위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위임

장의 사의표명 및 이후 진행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다는 것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한 것은 권한의 위임을 받는 과정이나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협회가 7월 22일 게재한 설명문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기자회견에서 '동의'라는 말과 '위임'이라는 말이 둘 다 쓰인 것은 잘못된 설명으로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바로잡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임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미 제10차 회의에서 감독 추천 업무 권한을 정해성 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날 회의는 그 자체로 위원들이 그러한 권한의 부여를 결정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미 전권을 위임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집한 임시 회의는 후속절차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는 회의라고 인정할 규정상, 사실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임시 온라인 회의는 위원들이 몇 달간 관련 업무에 힘써오며 좋은 결론을 기다려온 분들이기에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지지를 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 회의내용을 놓고 '이임생 이사가 위원들로부터 감독 추천 및 선임 권한을 위임받았다, 못 받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 또한 비록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임시 온라인 회의에서 '발표 전에 최종 보고를 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 근거한 업무진행이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지나친 판단입니다.

## ② 문체부가 홍명보 감독 면접과정이 불투명, 불공정하여 관련 업무가 부당하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3인 후보자와의 면담 및 협상 진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정해성 위원장이 추천한 1~3순위 후보를 모두 만나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3 순위를 차례대로 만나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외국인인 2,3순위 후보자와 해외에서 먼저 진행하고, 1순위인 홍명보 감독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1순위 후보자를 만나기 전에 외국인 후보자 2명을 먼저 만난 것은 현직 감독인 1순위 감독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C를 미리 마련해놓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렇게 2,3순위 외국인 감독을 직접 확인하고 협상을 어느 정도 조율해놓은 뒤, 1순위인 홍명보 감독을 가장 마지막으로 면담하고 협상하여 감독으로 내정하게 된 것입니다.

—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술총괄이사가 1순위 후보자인 홍명보 감독을 만나기 위해 4~5시간 기다리고, 그 장소가 자택근처인 것이 다른 후보자를 대할 때와 태도가 달랐다고 지적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외국 감독을 만나기 위해 협회에서 4명(기술총괄이사, 본부장, 변호사, 통역 겸 대표팀 매니저)이나 되는 인원이 수일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그들이 머물고 있는 유럽 도시로 일일이 출장을 가는 준비과정 및 자세도 홍명보 감독의 경우와 비교할 때 만남의 방식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특혜가 아닙니다.

— 홍명보 감독을 만났을 때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역시 2명의 외국인 감독은 당시 맡고 있는 팀이 없는 무직이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프로팀 현직 감독으로서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하기 위해서는 구단과 계약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결정을 독려하는 것이지 특혜가 아니며, 태도의 다름이 문제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후보자들을 만날 때 아무 자료도 남기지 않아 실제 면접이 이뤄졌는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을 위해 감독 후보자 면접 등 관련 자료는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하나' 라고 전제하였는데, 본 협회에는 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을 위해 평가표를 만들거나 문답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팀 감독 후보들을 검토하고 평가하고 협상함에 있어 외국 감독과 국내 감독 모두에게, 특히 현직 감독에게도 공개적으로 지원하게 하고, 정해진 면접장으로 나왔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차에 응할 수 있는 감독은 아주 한정적일 것이고, 현직인 감독은 대부분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의 추천 Pool이 좁아지고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지도자의 경쟁력 수준도 낮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③ 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 시 이사회 개최 전에 감독을 내정·발표한 것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 건을 이사회 서면결의로 선임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협회는 홍명보 감독을 내정·발표한 뒤 정식 선임절차를 위해 3일간 이사회 서면결의를 실시했습니다. 이사들에게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고, 이사들은 서면결의 답

변에서 찬성한 경우도 있고 반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내정된 감독에 대해 부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결 결과 선임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사회가 결정권한을 절차에 따라 행사했다는 뜻입니다.

#### ④ 허위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회가 7월22일 게시한 2건의 설명문건의 경우 수개월간 이어진 진행과정의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일부 오류나 불충분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감독선임과 관련해 더 잘 설명하고 알리기 위한 의도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이지, 어떠한 왜곡의 의도도 없었습니다.

#### <클린스만 감독 선임의 경우>

① 문체부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 당시 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는 지적은 다음과 같은 배경과 상황,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조언과 자문을 하는 기관으로서, 당시 위원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했고, 이러한 역할에 따르는 권한이 심각히 침해받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앞서 카타르월드컵 직후인 2022년 12월 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초청 월드컵 16강 진출 축하 오찬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선수들이 차기 감독으로 외국인 지도자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점 상 3월 FIFA A매치 윈도우를 앞두고 감독 선임도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뮐러 위원장은 전력강화위원들을 위촉 중이던 2023년 1월10일 일단 이미 위촉된 위원들(위원장 포함 5명)과 사전 상견례를 갖고 (외국인 감독을 뽑아달라는)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 시급한 일정, 외국인 감독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경우에 보안유지의 필요성 등에 대해 우선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후 뮐러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1월25일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을 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감독선임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위원들은 자유로운 의견개진 후 해당 방안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회가 뮐러위원장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워 놓고 전력강화위를 무력화하여 위원회를 운영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문체부 감사에서 당시 1차 회의 결과 필수적인 정보는 위원들과 반드시 공유, 점검토록 했는데 이와 달리 위원들이 감독선임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축약본인 아닌 당시 회의록 전체를 보면 필수적인 정보는 공유, 점검한다는 것은 논의 중에 개진된 위원의 의견 중 하나였고, 오히려 비공개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칙에 대해 모두의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한 부분이 무엇이냐를 해석할 때 절차적으로 다시 정해야 되는 부분이나, 다시 모여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한정적이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1차에서 결정한 것과 바뀌는 부분이 없으므로 별도로 개별위원에게 공유된 사실이 없을 뿐이고, 최종 후보가 내정된 뒤 위원장은 제2차 전력강화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다음날 감독선임을 발표한 것입니다.

② 전력강화위원이 해야 할 감독 후보자 면접을 회장이 진행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지적은 뮐러 위원장이 진행한 1차 온라인 면접 이후 정몽규 회장이 두 명의 최종 후보와 진행한 부분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감독 추천을 위한 후보 평가를 위한 면접은 뮐러 위원장의 화상면접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장이 1~5순위를 확정했습니다(1순위 클린스만 감독). 이후 클린스만 감독과 S감독 2명의 후보자와 정 회장이 온라인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목적은 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고 청취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협상과정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협회가 5월 5일자 설명문에서 회장이 진행한 두 후보자 면담을 2차 면접으로 표현한 것은 일련의 만남의 과정을 연속적으로 표현, 설명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 면담은 후보자 선정을 위한 평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뮐러 위원장의 후보자 면접과 달리 회장의 온라인 면담과 관련한 기록이나 평가가 없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협회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회장은 최종 후보자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났으며 이는 당연한 회장의 직무입니다.

< 대표팀 감독 등 선임 시 이사회 선임절차를 누락한 것 >

**문체부가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각급 대표팀 지도자 선임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지속적으로 누락한 것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해당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각급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협회는 감독이나 코치, 트레이너의 계약사항이 조율되면 내부보고를 통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왔습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42조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그동안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 뒤에는 올해 3월 A매치 임시 감독으로 선임된 황선홍 대표팀 감독에 대해 5월 열린 차기 이사회에서 추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는 내정 발표 후 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여 정식선임 절차를 밟았습니다.

향후, 현실에 보다 부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